

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강원일보 오피니언

지난 7월 집중호우 이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최근의 변덕스러운 기상현상은 우리에게 기후변화의 현실성을 새삼 느끼게 한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이런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기후의 새 표준인 '뉴 노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는 물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측 불확실성으로 댐 및 보의 운영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된 강수량으로 봄·겨울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해 원래부터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 물 공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한정적인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이란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의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떠올릴 때 물의 사용량만을 고려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관로의 누수로 인해 물의 공급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소실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 보급률 확대 위주의 상수도 정책은 경제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당시 전국적으로 매설한 관로들은 현재 노후관이 되어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으로 인구수 대비 면적이 넓어 전국 평균대비 누수율(총 공급량 대비 미 요금부과량)이 높다. 21년 기준 도내 평균 누수율은 21%로 전국 평균(10.2%)보다 2배 이상 높아 연간 수돗물 약 3,775만톤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water 영서사업센터는 2017년 횡성군을 시작으로 인제, 원주, 철원 4개 시·군과 손을 잡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 중 횡성군은 2022년 유수율 88.8%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했으며, 사업 수행 중인 인제, 원주, 철원의 경우도 사업초기 평균 58%에서 2023년 6월 기준 평균 89.6%의 유수율 향상으로 약 136억원의 예산을 저감(누수량 678만톤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수도의 평균 요금 현실화율(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이 49.1%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면 현대화사업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또한 678만톤의 누수량 저감은 1,186tCO₂의 탄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

누수로 인해 버려지는 수돗물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인프라를 아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저감시킨 678만톤은 약 8,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고, 전기차를 약 1,300만km 운행한 효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출처:강원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소년범 방치해 강력범으로 키우는 사회

동아일보 오피니언

전국의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사건은 4만2,082건으로 5년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매월 4,000건 가까운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5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같은 기간 경찰청이 집계한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166만 건에서 148만 건으로 11%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소년범 증가가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로 성인(5%)의 2배가 넘는다. 재범 소년 중 절반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는 통계도 있다.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은 12세 이후 14차례나 법원 소년부를 들락거렸고,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둘러차기범'도 14세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소년원과 교도소에서 보냈다. 성장기에 교화의 기회를 놓치고 탈선을 거듭하는 바람에 흉악범으로 전락한 대표 사례다.

청소년 비행의 경우 초기 교화 노력이 중요하지만 성인범으로의 전이를 막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소년범을 사후 관리해 재범을 막는 가정조사관은 전국에 221명뿐이다. 인력 사정이 가장 나은 서울도 조사관 1명이 80명의 아이들을 맡고 있어 대면 상담은커녕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년보호시설엔 빈자리가 없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소년범을 수용하는 정신병원은 전국에 한 곳뿐이다. 소년범을 방치해 강력범으로 키우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미성년 강력범죄자가 증가하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초범소년 기조를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

소년범은 형사 처분의 대상이자 선도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소년범의 재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불안한 가정 환경이다. 가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범죄 예방과 사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관계부처합동

하반기에는 교통약자·취약분야의交通安全 중점적으로 챙긴다

- 관계기관 합동交通安全대책 점검회의, 대형사고 등 취약분야 집중 논의 -

- 정부는交通安全 대책의 상반기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 추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交通安全대책 점검회의*’를 9월 5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 (참석) 국토부·행안부·경찰청, 시·도, 한국도로공사·한국交通安全공단·도로교통공단 등
-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교통약자, 대형사고 등交通安全 취약분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동기 대비 4.9% 감소, (‘22년 상반기) 1,219명 → (‘23년 상반기) 1,159명
- 먼저,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우회전 일시정지 정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설치해 나간다(현재 156개 설치). 보행자우선도로* 39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87개소(국도 60개소, 지방도 27개소)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 보·차도 미분리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는 도로(현재 166개소)
 - 또한 개학 시기(‘23.8월말~9월말)에 집중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방호울타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며(736개소), 노인보행자 고위험지점 등 교통약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점검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 (대상)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참여)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지자체 등
 -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행위에 대해 경찰의 상시적 단속과 공익제보단*의 제보를 통한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이륜차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공익신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交通安全공단, 5천여명)
- 최근 이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높은 버스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사고 이력이 있는 버스업체(200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세버스는 관계기관 합동 불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버스 교통사고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 *交通安全법 제33조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수단에 대해交通安全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하는 것으로 중상1명+경상1명 이상 사고가 발생한 버스업체 대상 실시
 - ** 가을철 관광지 10여곳 대상으로,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交通安全공단 등 합동점검
 - 고속도로 정체 및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는 계도 및 선별적 단속을 통해 지정차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착시키고, 행락철은 대형버스 등 법규위반 단속, 연말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드론을 활용하여 고속도로상 법규위반 행위를 AI가 자동 선별·신고하는 ‘AI 자동적발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3년 하반기 시범운영과 효과분석을 거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부는 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25톤이상)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인터넷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예 쿠팡)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交通安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交通安全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행사 및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각종 행사(보행자의 날,交通安全발전대회 등), 캠페인(횡단보도 손짓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보행자 및 고령자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공익광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이동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각 기관에서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연말까지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생활속에서交通安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청, 스팸·문자사기 걱정 없는 모바일 안내문 제공

-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에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보세요 -
-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로고와 안심문구를 확인하세요 -

- 앞으로 납세자는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국세 관련 신고·신청·환급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월 말부터 먼저 근로장려금 수급자 약 3백 만명에게 네이버·KB국민은행·신한카드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 앱을 통한 모바일 안내문은 발송사업자의 로고와 전자문서 문구가 포함된 알림(푸시)을 누르거나 각 앱에 개설된 국세청 전용 전자문서함을 통해서 스팸, 문자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이동통신 3사(KT·LGU+·SKT)를 통한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도 9월부터는 스팸·문자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자(RCS) 체계를 도입하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를 삽입하여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바일 안내문 발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대전화로 국세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인의 K-관광, K-컬처 탑재로 전면 업그레이드한다

- 9월 베이징·상하이 K-관광 로드쇼 개최, '24년도에는 5개 도시로 확대 -
- 올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면세쇼핑 환급 간소화 -
- 칭다오 마이스 로드쇼 개최(9. 5.),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연내 조기 개장 지원 -
-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관광상품 선정, 'K-컬처 버킷리스트 챌린지' 1만 명 체험 -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9월 4일(월)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프리미엄화 전략인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 중국은 7월부터 월별 방한 외래관광객 수 1위로 올라섰으며(22만 4천 명), 8월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까지 방한 규모 1위('19년 602만 명)였던 중국은 중국인의 1인당 한국 여행 중 지출 경비가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 38%가 높아 관광 수출 진작을 위한 핵심 관광시장으로 꼽혀왔다.
- 다만 코로나 이후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 역시 유형과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진화하는 중국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국인 방한 수요가 높은 K-컬처와 K-푸드, K-뷰티 등의 특화된 체험으로 관광시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는 ‘중국 방한관광 업그레이드’ 전략을 가동한다.

재개 후 질적도약 모색		
양적성장과 그늘 · '13년부터 최대 방한시장 · '16년 8백만 명 돌파 · 저가관광, 혼잡 등 문제	위기와 노력 · 한한령('17. 3.)으로 단체관광 중단, · 개별관광객 유치 모색 · '20년부터 코로나로 중단	· '23년 개별관광객 회복세 증가 · 중상류층 타겟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 저가관광 자발 방지를 위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1.0) 1998~2017	(2.0) 2017~2022	(3.0) 2023~

- K-관광 로드쇼, 중국 온라인여행플랫폼 프로모션 등 다채로운 마케팅 가동
 - 중국의 국경절 연휴(9. 29.~10 .6.)를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K-관광 마케팅을 다변화한다. 올해는 베이징(9. 13.)과 상하이(9. 15.~17.)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열고, 2024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로 확대해 개최한다.
 - 중국 3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씨트립, 취날, 통청과도 협력한다. 씨트립과 함께 상하이 로드쇼에서 호텔과 항공권을 현장 생중계로 판매(9. 16.)하고,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취날·통청에서 ‘한국여행의 달’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하게: 올 연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면세 쇼핑 환급 절차 간소화

- ‘2023 한국방문의 해’ 계기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1만 8천 원 상당)를 면제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한다.
- 공항 슬롯(이·착륙 운항시각) 확대를 통해 한중 간 항공편을 증편하고, 현재 입항 신청 중인 중국발 크루즈의 선석(접안부두)을 신속히 배정해 입국이 더욱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 씬씬이가 큰 중국 관광객의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쇼핑 행사를 실시한다. 지역 전통시장, 백년 가게* 등을 홍보해 서울에 집중된 중국 관광객의 소비를 다변화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 11.~30.)에 면세점 할인 축제(Korea Duty Free Festa)도 함께 개최한다.
* 백년 가게: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지정)
- 중국인이 널리 쓰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모바일페이 가맹점 25만 개소를 추가 확대하고, 10월부터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요 관광지에 위치한 K-뷰티 업종과 약국 등 추가 200개소에서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24년부터는 사후면세점에서 환급이 가능한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3만 원→1만 5천 원)하고, 즉시환급 금액 한도는 상향(1회 50만 원→70만 원)해 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 달라진 수요에 맞춰 비즈니스 관광(MICE), 카지노, K-컬처, 의료관광 등 프리미엄 관광상품 개발 및 유치

- K-컬처의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비즈니스 관광(MICE) 유치 등을 통해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한다. 중국 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관광상품’을 선정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갱신 평가 시 우대해 프리미엄 관광상품의 개발과 유통을 촉진한다.
- 국내 20개 기관과 포상관광 수요가 있는 기업 등 170여 명이 참여하는 ‘칭다오 마이스(MICE) 로드쇼’(9. 5.)를 개최해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를 연다.
- 100인 이상의 대규모 마이스(MICE) 관광과 수학여행 시 해당국 주재 공관과 한국관광공사의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비자 신청과 국내 관광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연내에 조기 개장하고, 제주·부산 등 크루즈 기항지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한다.
- ‘2023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드라마와 예능, 게임, 패션, 뷰티, 음식 분야 인기 국가 1위로 한국을 꼽을 만큼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 9월부터 항공권 구매 시 ‘K-컬처 버킷리스트 챌린지’에 응모할 기회를 부여하고 추첨을 통해 1만 명에게 ‘프로게이머와 함께 하는 이(e)-스포츠’, ‘한강 감성 피크닉’, ‘K-리그 야구 응원’ 등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한다.
-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축제와 행사로 구성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MZ세대가 선호하는 성형·미용, 중장년층 대상의 건강검진과 관광을 결합한 상품도 집중 마케팅할 계획이다.

□ 중국 단체관광 재개 초기 시장 질서 확립으로 저가 관광 등 재발 방지

- 문체부는 중국 관광객이 본격 증가할 9월부터 국경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6일까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광경찰과 협력해 저가 관광과 불법 숙박 등을 예방하기 위한 초기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논란이 있는 축제는 문화관광축제 인증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국전담여행사의 업무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에 따라 상시퇴출제도도 엄격히 운영한다.
- 면세점이 여행사에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지급해 여행사 간 출혈경쟁과 관광객 대상 쇼핑 강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송객수수료와 판매정보의 세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수시 점검한다. 11월까지 유원시설, 관광지 궤도시설(케이블카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중국 관광객의 건전하고 왕성한 국내 소비활동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강인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K-컬처의 매력으로 중국인의 K-관광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관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2년도 일본의 고향납세 실적 공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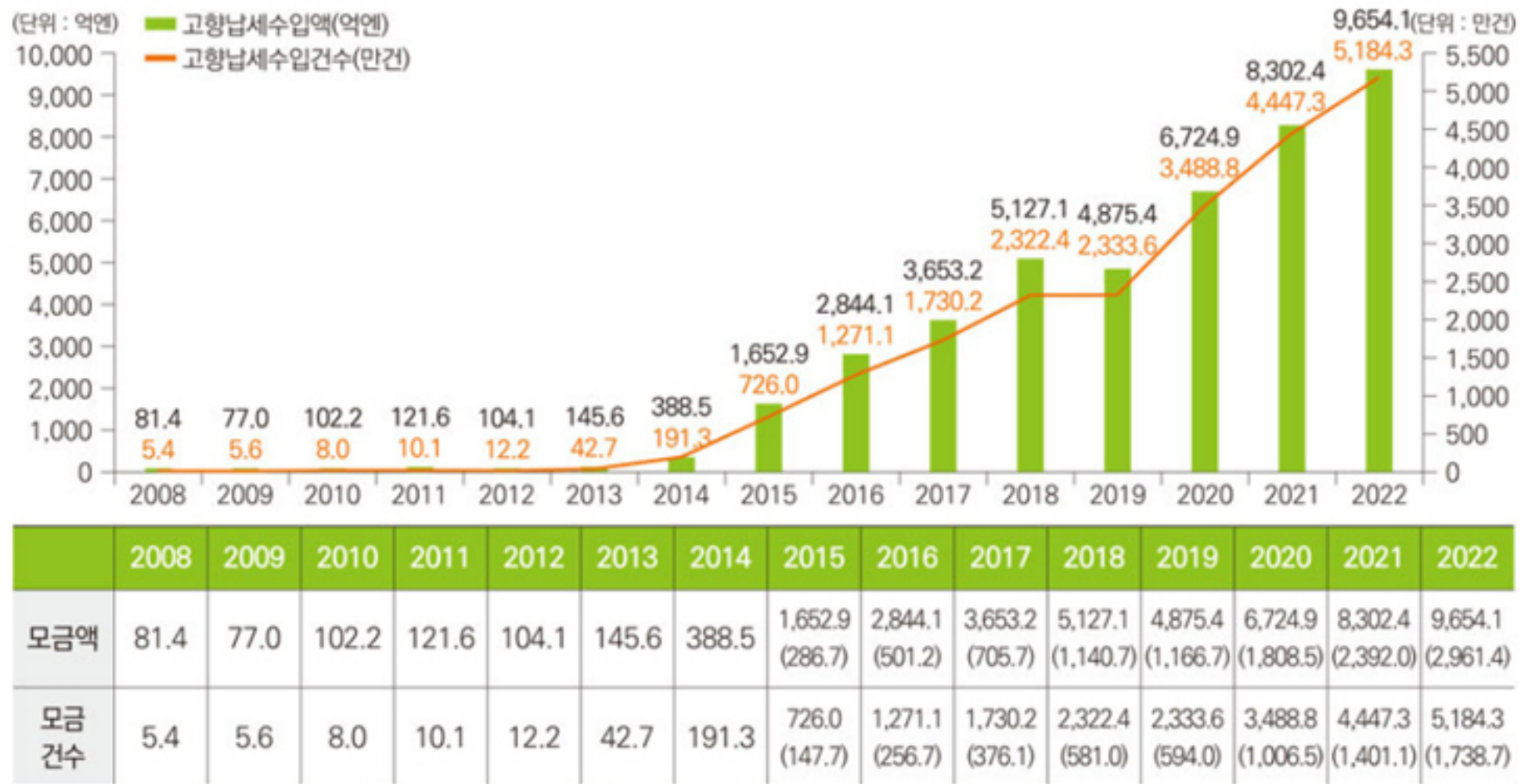
신 두 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01. 2008년 고향납세제도 도입 후, 최근 8년간의 연평균 증가율49% 기록

2022년 기준 10조원에 가까운 모금 실적, 앞으로도 우상향 실적을 보일 것인가?

- 일본은 2008년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초기 81.4억엔의 모금실적을 보였으나 2022년도 9,654.1억엔을 모금함
- 이러한 모금 실적은 최근 8년동안 연평균 4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모금액은 직전년 8,302.4억엔에서 9654.1억엔으로, 모금건수는 직전년 4,447.3건에서 5,184건으로 각각 1.2배 증가하였음
- 아울러, 고향납세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원스톱특례제도의 이용실적은 도입해인 2015년 286.7억엔(16.3%)에서 2022년도에는 2,961.4억엔(30.7%)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일본 2022년도 고향납세 모금현황



* 주 : 1) 고향납세수입액 및 건수는 지자체가 개인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을 계상한 것임
2) '11년 동북지방 태평양해역 대지진 관련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3) () 내 값은 고향납세 원스톱 특례제도의 이용 실적임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02. 분야 및 사업선택형 지정기부로 신뢰증진 및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

분야선택이 가능하여 기부자의 지자체 관심 증가와 지자체 기금사업 발굴 용이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기부자는 지자체의 사용용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임
- 기부 플랫폼 중 하나인 후루사토초이스를 통해 분야를 살펴보면, 자연보호 등 고령자, 어린이·청소년, 전통보전 등, NPO·각종단체지원, 문화·예술·생애학습, 공공설비 등 제레 등 농림어업·수산업·상공업, 의료·복지, 관광 스포츠, 음악, 환경·경관, 지자체 일임, 국제교류, 재해부흥, 그 외 등으로 구분됨
- 이러한 분야 지정형 기부형태는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처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분야 발전을 기대하고 기부결정 단계부터 지역에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임
- 아울러, 분야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 및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을 줄여주고, 지자체 담당자로 하여금 사용결과를 명확히 하고 기부자에게는 사용성과를 공유하는 등의 적극적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사용처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 수는 2022년도 실적을 보면 1,745단체(97.7%)였으며, 이 중 분야 선택이 가능한 지자체는 1,677개의 지자체로 약 94%를 차지함

• 2022년도 고향납세 모금 시 사용처 선택 가능현황 •

고향납세 모집 시 사용 (고향납세를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 등)의 선택		'23년(22년도)결과 단체수(비율)	'22년(21년도)결과 단체수(비율)	'21년(20년도)결과 단체수(비율)
	선택 가능	1,745(97.7%)	1,746(97.7%)	1,736(97.1%)
	선택 불가능	41(2.3%)	42(2.3%)	65(2.9%)
'선택 가능'으로 답한 단체의 선택 가능 범위	분야 선택 가능	1,677(93.9%)	1,698(95.0%)	1,673(93.6%)
	구체적 사업 선택 가능	431(24.1%)	460(25.7%)	449(25.1%)
	* 클라우드펀딩형	337(18.9%)	318(15.9%)	285(15.9%)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 %는 전 지정단체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 클라우드펀딩형 고향납세란, 목표금액, 모집 기간 등을 정하여 특정 사업에 고향납세를 모금하는 것(프로젝트 총 수 : 784사업, 기부금 모금 총액 : 18,386백만원)

답례품 조달 비용 30% 이내 수준 유지와 제 비용 50% 이내 유지

- 2022년도 답례품 조달 비용이 모금액의 27.8%라는 것은 총무성의 답례품 조달 비용이 30% 이내라는 상한이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며, 과거 발생했던 과열경쟁이 제어되고 있는 것임
- 또한 일정 수준의 지자체 세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답례품 조달 및 제 경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2022년도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모금액에서 제 비용은 46.8% 수준임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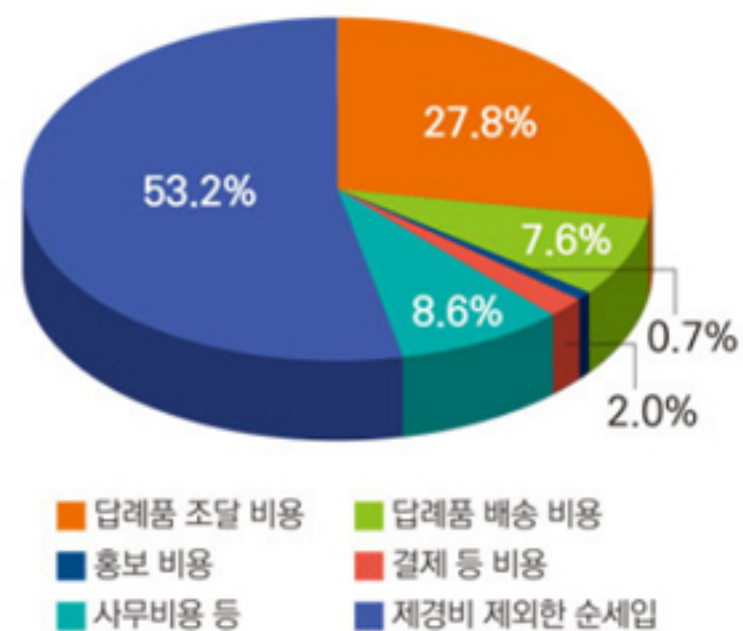
• 2022년도 고향납세 답례품 조달비용 및 제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모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3('22년도) 조사결과	'22('21년도) 조사결과	'21('20년도) 조사결과
답례품 조달 비용	268,728	27.8%	27.3%	26.5%
답례품 배송 비용	73,179	7.6%	7.7%	7.7%
홍보 비용	6,682	0.7%	0.6%	0.6%
결제 등 비용	19,721	2.0%	2.2%	2.3%
사무 비용 등	83,421	8.6%	8.6%	8.0%
합 계	451,731	46.8%	46.4%	45.1%

* 자료 : 총무성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조사 결과(2023. 8. 1. 기준)

고향납세 모집비용 비율



고향납세 주민세 공제액 및 공제 적용자 수의 증가

- 2013년 이후 지속적인 고향납세의 증가에 따라 주민세 공제액 및 공제 적용자 수도 6,798.2억엔, 891만명 수준까지 증가함
-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공제액 규모 및 공제 적용자 수의 증가는 결국 세입이 증가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지자체도 발생하여 세입이 감소한 지자체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원책(교부세로 보전)이 마련됨
-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가장 많은 주민세 공제액을 차지한 곳은 도쿄도 168,954백만엔이며, 가장 적은 주민세 공제액을 차지한 곳은 돗토리현 1,268백만엔으로 격차가 약 13.3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음

03. 일본의 고향납세 시사점과 향후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 방향

다양한 답례품 발굴과 지정 기부를 통한 기부자들의 관심 증대

- (다양한 답례품 발굴) 지역자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 단순한 농수축산물 답례품뿐만 아니라 지역방문형 관광상품 등을 발굴하고, 답례품마다 의미 부여

- (사용처 및 분야 지정) 기부자들에게 사용처나 분야를 지정하게 하여 지역 사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함
 - 고향납세 모집 시 모금액의 사용처나 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클라우드펀딩(GCF, Government Crowd Funding)기부도 추진하고 있음
 - GCF 프로젝트는 2022년도에 총784건 18,386백만엔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전체 지자체의 약 19%가 클라우드 펀딩형 사업 발굴과 모금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추진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기부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부자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함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제도개선

-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고향납세제도는 특히 근로소득자들로 하여금 개인의 부담금 2,000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과 소액이라도 기부를 통해 지역을 살릴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원스톱특례제도 및 기업기부 가능) 기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5년 원스톱특례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어 기업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들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2015년 4월부터 원스톱특례제도 도입, 기부자들의 번거로운 기부 행정 절차를 간편하게 지원함
 - 지방창생의 충실 및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기업판 고향납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 약 10%를 제외한 최대 9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출처 :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정책
소식 이번 주
미리 CHECK!

“2명도 다둥이” 다자녀 혜택 총정리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8.16)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 뭐가 달라지나요?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 ✓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 마련
- ✓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1차례 우선 공급 받기 가능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감면

-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적용
- ✓ 140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취득등록세가 140만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



3 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등) 이용료 할인

-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 변경하여 할인 혜택 적용(국립극장, 미술관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이에요)
- ✓ 영유아 동반자 우선 입장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검토



4 초등돌봄교실·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 초등돌봄교실 : 지원 대상 확대
- ✓ 아동돌봄서비스 : 본인 부담금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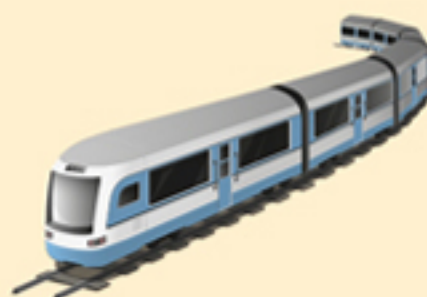


그 밖의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KTX·SRT 철도 운임 할인

약 30% 철도운임
할인 혜택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 도시가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시 출산크레딧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어요!



출산축하금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가 많을 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증가해요.
본인이 사는 곳의 정확한 출산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아이사랑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소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s://www.childcare.go.kr/>)



P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서울 시민들은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 또한 30%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자녀 우대카드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이 가능해요!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혜택,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10여가지에 이르는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정부 24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이 안 되는 항목은 개별 신청)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항목이 더욱 확대되며,
지역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출처: 관계부처합동